

건강 칼럼

노인을 괴롭히는 '파킨슨병'

최근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이 80.4세로 40년 전 보다 약 18년이나 늘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평균수명 80세에 맞춰진 교육, 정년, 복지 등 국가정책의 틀도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들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최근 노인들 사이에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과 야기가 되는 병 치매, 그리고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파킨슨 병이다.

▲ 파킨슨병이란?

파킨슨병은 안정 시 떨림, 경축, 서동증(운동의 속도가 작아짐) 및 체위 불안정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운동 능력이 점차 감소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하며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현재까지 명확한 유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이로 인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어 일어나는 질병이다. 5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 유전적 요인이 일부 연관되며 농약, 일산화탄소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두부 손상이 있는 경우 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파킨슨병 의심 증상?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초기에는 떨림이나 서동증 증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

떨림은 동작을 하거나 무엇을 집을 때 발생하는 떨림보다는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손가락이나 손목 관절, 발과 같은 말단 부위에 떨림이 생긴다. 떨림은 파킨

슨병 환자의 70%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초기에는 양측성보다는 일측성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얼굴 표정이 없어서 가면양 얼굴을 하거나 이전과 다르게 목소리가 작아져 상대방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지거나 보행 시 한쪽 다리를 끌면서 걷는 증상이 보일 수 있다.

보행 시 보폭이 작아져 종종걸음을 걸으며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경우에도 파킨슨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파킨슨병 치료 방법?

도파민 부족으로 증상이 발생하므로 도파민을 보충해 주거나 도파민 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해서 파킨슨 증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래에 레보도파 도파민 작용제, 합성레진, 모노아민산화소 억제제 등 여러 항 파킨슨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약물들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연령, 유병기간,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약물치료 외에 전기 자극을 통해 뇌의 운동회로의 기능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적 방법도 파킨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파킨슨병을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혼동하곤 하는 데 파킨슨병은 몸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운동 질환인 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인지 기능은 떨어지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는 이상이 없는 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오래 앓는 환자에게서도 치매가 올 수 있다. 어떠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는 달리 힌트를 주면 기억을 되살려 내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제 몫 잡아라

전북도는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주목해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 재생뉴딜 사업 시범 사업안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내달 말에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 공모로 7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물가 인상이 늘 있었음을 감안해도 50조 원 규모의 사업은 거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아직 6조 원대임을 생각할 때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전북도더러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주목하라는 이유는 뚜렷하다. 도시 재생 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도내에 혜택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냥 낙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경쟁의 소신이 될테니까 말이다.

이번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 약속과 관련해 신뢰를 받지 못했음을 잘 알 것이다. 전주 노송동의 집창촌을 새롭게 변모시키겠다는 약속만해도 그렇다. 문화와 인권의 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 약속을 했고 또 시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까닭에 미적거리게 역력했다.

본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포함해 다른 시군들도 욕심을 내볼 일이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착수할 모양이므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욕심을 냈으면 한다. 각 시군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주문이다.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여전

전북도는 추수철을 맞아 도내 농촌을 면밀히 보아야겠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을 펼쳐온지 그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농가 소득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는 10년간 2482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하위 20%는 동일한 기간에 겨우 81만 원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는 저번의 보도가 다시 새롭다.

전북도는 도내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 전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말해왔다. 그런데 농촌의 실상을 보니 소득 증대는 상위 부농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다. 농민들 중에 소득이 증대됐다고 말하는 이가 별로 없었던 이유를 알만하다. 전북도가 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테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전북도가 펼쳐온 삼락농정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오늘날이다.

전북도는 농가를 위해서 삼락농정 비전을 여러번 제시했다. 삼락농정은 주요한 도정 현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말하기도 했다.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농생명 산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라는 주문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충분하다. 도내 농민 대다수는 우리 전북지역이 농도가 맞다며 물어보고 있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가를 위하여 이런저런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농가들간에 존재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격차를 좁혀 가면서 삼락농정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이든 농생명 산업의 허브화이든 추진의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 농촌의 환경이 변해야 하고 농업의 성격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처럼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민을 고민해야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전북도는 이제 가난한 농가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오래전에 말했던 바, 농생명 산업의 확대도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업 발전이 도정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말했으므로 그 실천에 힘찬 모습을 보여야겠다.

독자재언

농기계 안전사고 함께 예방하자

농기계 사고는 이양기인4~6월과 추수기인 10월 즈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로는 오후4시~8시로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부주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운전 시 전복, 추락, 압착, 도로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 등이 있다.

특히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하여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농기계 운전자는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 농기계를 사용하고, 특히 저녁 및 야간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사판 등 안전표시 장비를 철저히 장착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번기 농촌지역을 통행 시 각별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작동법 충분히 숙지하기, 음주 후 농기계 작동하지 않기, 도로에서 교통법규 준수하기, 기본적인 안전사항(반사판 부착) 확인·숙지하기 등을 잘 지켜야 한다.

매년 농기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기계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안전운전으로 농사철 더 이상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불법촬영은 범죄... 성 인식·문화 개선돼야

최근 대한민국은 '불법촬영' 천국이 되고 불법 민중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

불법촬영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각종 음란물이 쏟아지다 보니 사회적으로 불법촬영이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가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

본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죽을 정도의 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의 본질이 여성은 남성의 본능을 해소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성차별 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일종의 '여성혐오' 현상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몇몇 사람의 인식

변화 또는 관념 강하나 단순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법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면 불법촬영 문제도 차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사방이 불법촬영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 발달로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언제든 정보 수집이 가능한 시대의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성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촬영은 단순한 관음증이 아닌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자급자족이라도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오재복 전주원신경찰서 서부파출소경장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